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6/ 21 통권 162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기업이 열망이면 CEO는 아홉냥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하세요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토지·건물 양도차익의 별도과
세는 납세자 유리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대손세액공제요건 및 적용절차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계산 해
설
-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
예고
-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사업상 비밀 사용료의 본질로 법원판결로 지급받
는 경우라도 판결확정시점에 부가세 과세됨 (p.15)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과 일반신고의 비교〉

개념구분	일반적법신고	성실신고확인
업무정의	매년 5월 31일 마감일까지 적법신고	매년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 인증 확인신고
확인방법	자기신고 + 또는 외부조정신고	외부회계사 · 세무사의 적격인증확인 (사전 세무실사의 개념 : 계정별 적격증빙 확인 입증)
적용범위	대부분 사업자 해당	농업 등 15억 이상, 제조업 등 7.5억 이상,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복수업종	업종별 세무조정	업종별로 성실신고 적용 판단 (각각 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	해당없음	직접사용금액의 60% ≤ 총액 120만원 한도
의료비, 교육비	필요경비 아님	세액공제 : 지출액×15%
성실확인수수료	세무조정수수료만 적용	세무조정 수수료 + 성실확인수수료 (한도액까지 200만원 내외 적용)
미실행 가산세 등	해당없음(과소신고 20%)	미수행시 산출세액×5% 매출액의 0.02%중 큰 금액
사후관리	부적법 세무조정시 세무조사(징계가능)	부적격수행시 세무대리인 필수 징계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28호 / 주간 25호

2023. 06. 21.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예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고 일반신고의 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토지·건물 양도차익의 별도과세는 납세자 유리	2
C E O 에 세 이	기업이 열ninger CEO는 아홉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문의 - 온라인상품권 인지세 관련하여 - 외국법인과의 용역계약시 부가세 문의	5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대손세액공제요건 및 적용절차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일반증여 - 저가양수도 비교 -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10 11
직 장 인 Survival	직장인 영어회화 공부법 9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사전법규부가-1897, 2022.04.13) -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서면법규소득-2067, 2022.10.06)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국산차 등 사치품 개소세 3년→2년으로 조정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사업상 비밀 사용료의 분쟁으로 법원판결로 지급받는 경우라도 판결확정시점에 부가세 과세됨	12
세 무 정 보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의 계산 해설	16 29
회 계 정 보	-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44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개인사업자의 사업용토지 · 건물양도차익을 종합소득과 별도과세는 납세자에 유리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개념구분	사업수입, 사업소득	양도차익, 양도소득
개념정의	매년 발생한 사업활동소득	열거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규정내용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 (단서에 부동산양도소득은 제외)	좌동 + 소득세법 제94조
소득특성	매년 적극적, 능동적 활동 정규발생	장기간 시세상승누적차익의 일시 실현
적용세율	다단계누진세율(6~45%)	좌동 : 부동산 양도년도 일시과세
소득의 원가	열거된 사업수입의 필요경비 +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비용인정	토지원가 + (건물원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수입금액에 통상적 대응비용(구체적 열거)	취득원가 + 장기보유공제(물가상승공 제)
별도과세 이유	1년단위소득에 장기간 누적소득을 합하면 납세자의 최고누진세율이 주로 적용 되므로,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수익과 구분된 별도소득으로 따로 과세함	
유형자산	감가상각자산(건물 등 차량, 운반구, 기 계, 설비, 무형자산 등)	주로 토지 + 감가상각 후 건물가액 등

기업이 열냥이면 CEO는 아홉냥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노하우(know-how)인 연구개발(R&D)이야 말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R&D의 요체, 하이테크는 IT, NT, BT, ET, ST, CT 등 6T다. 정보테크(IT·Information Tech). 2진법 디지털은 21세기 하이테크 기반기술이다. 나노테크(NT·Nano Tech). 초미세기술이다. 바이오테크(BT·Bio Tech). '배아줄기세포'로 난치병에 도전하는 것은 인류의 희망이다.

환경 테크(ET·Environment Tech). 무공해 에너지 생산은 환경을 생각하는 인류의 소망이다. 우주항공 테크(ST·Satellite Tech). 우주 공간은 제3의 땅이고 자원이다. 문화 테크(CT·Culture Tech). 문화는 삶의 배경이자 가치창출의 관문이다.

바야흐로 문화가 곧 돈이 되는 시대다. 이를 흔히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라 한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수인 피터 듀런드(Peter Duelund)의 지적이다. 사실 이제 옷도 원단과 봉제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것이다.

인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23년 동안 1억 명의 관객과 6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쏘나타 180만대 판매수익과 맞먹는 '노다지'다.

일찍이 일본의 노무라(野村) 종합연구소는 국력의 척도도 군사력과 경제력에 이어 문화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세계가 이미 '창조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일본 두뇌유출의 대명사다. 그는 세계적 발명이라는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했다. 그런데 일본회사에서 푸대접을 받아 돌연 미국을 향했다. 모조록 기술개발을 샘솟게 만드는 사회풍토가 절실하다. 품질 좋고 '값싼(Reasonable Price)' 최강의 제품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know-how가 한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모두 잘되기 힘들다. 각각 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발산업의 경우 디자인은 미국, 개발과 소재공급은 한국, 생산은 동남아에서 이루어졌다. 즉 know-how와 know-where가 결합했다.

하지만 know-how와 know-where가 결합한 것 같으면서도 특이한 사례가 있었다. 한세는 남

들이 다 "채산성이 없다"고 포기했던 의류 수출 전문회사다. 그것도 100%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출이었다.

"미국인이 입는 티셔츠 가운데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한세를 입는다"는 소문과 함께 매출을 올렸다.

1988년 사이판에 처음 해외공장을 세운 이래 2001년에는 베트남, 2004년에는 중국 등에 공장을 세웠다.

그래도 저임금의 대량생산만으로 중국·인도는 물론 동남아 국가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과 인도를 어떻게 따돌렸을까. 그게 바로 '경영의 묘수'다. 한세의 CEO 김동녕 회장은 일찍이 OEM의 방식을 바꿨다. 상표는 주문자의 것이지만 디자인이나 제품은 한세 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방식이다. 수요와 공급이 만날 수 없는 공간에서 점점을 창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IT경영·투명경영·민주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힘썼다. 이것이 바로 중도실용·통합이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CEO다. "기업이 열냥이라면 CEO가 아홉냥이다." CEO가 누구냐에 따라 기업은 달라진다. 바로 know-who다. 첨단 산업도 좋지만 자기 일을 첨단화하면 사양기업은 없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9일 (금)	6월 12일 (월)	6월 13일 (화)	6월 14일 (수)	6월 15일 (목)
미	달 러 (USD)	1306.10	1294.90	1291.10	1277.50	1275.90
일	본 엔 (JPY)	940.69	928.81	925.75	911.49	911.00
영	국 파 운 드 (GBP)	1640.72	1628.47	1615.75	1610.80	1615.67
캐	나 다 달 러 (CAD)	977.88	970.80	965.92	959.55	957.34
홍	콩 달 러 (HKD)	166.67	165.19	164.78	163.08	162.94
중	국 원 (CNH)	182.72	181.78	180.59	178.19	177.98
유	로 화 (EUR)	1408.50	1391.50	1389.55	1378.55	1382.18
호	주 달 러 (AUD)	877.18	873.09	871.94	864.74	867.04
싱	가 폴 달 러 (SGD)	972.92	963.75	961.03	951.76	951.21
말	레이시아링기트 (MYR)	282.80	280.65	279.46	276.69	276.08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문의

Q 2022년 12월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했는데
지급은 23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내역도 같이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A 2022년 12월 귀속 2023년 1월 지급 기타소득의 경우 2022년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2023년 2월말까지 신고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상품권 인지세 관련하여

Q 온라인상품권 인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온라인상품권 인지세신고를 상품권 판매 후 팔린 수량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해도 되는지요? 만약 신고하지 못하고 판매 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모바일상품권의 경우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에 관한 구체적 절차 등은 귀사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되며, 기한내 국세의 미납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외국법인과의 용역계약시 부가세 문의

Q 국내기업 000사 중국법인(갑)과 우리회사(을)은 '실증' 연구용역을 계약하고,
우리회사(을)은 국내기업 000사 중국법인(갑)에 용역비를 청구하고 국내기업 000사 중국법인은 우리회사(을)에 용역비를 지급함.
용역비는 원화로 계약하고 용역대금은 국내기업 000사 중국법인(갑)명의 중국상공은행 계좌에서 우리회사 하나은행 계좌로 원화로 송금함.
<질문개요>
위 용역과 관련하여 해외용역 수주에 대한 부가세 판단기준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0) 000회사 중국법인에 대한 용역제공도 국내에서 비거주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 하는것이 맞는지?

- 1) 용역성격이 면세일 경우 : 부가세 X, 부가세 신고 X, 매입세액 공제 X
- 2) 용역성격이 과세일 경우
 - 2-1) 영세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부가세 0원, 부가세신고 0, 매입세액공제 0
 - 2-2) 영세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가세 10%, 부가세 신고 0, 매입세액 공제 0
- 3) 0세율 조건
 - 3-1) 대금지급 조건 : 본 사안에서 정한 대금지급 조건이 0세율 조건에 해당하는지
 ***용역비는 원화로 계약하고 용역대금은 국내기업 000사 중국법인(갑)명의 중국상
 공은행 계좌에서 우리회사 하나은행 계좌로 원화로 송금함
 ***인보이스에 contract amount must be paid in korean won으로 표기
 - 3-2) 상호주의 : 본 용역(과학 서비스(연구개발업))은 용역을 제공받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중국은 상호주의 적용시 0세율이 적용되
 는 국가인지?
 - 3-3) 대금조건 및 상호주의 외에 0세율 적용을 위한 다른 검토 조건은 없는지 ?
- 4) 본 사안에 적용되는 부가세법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 5) 만일 0세율이더라도 거래당자간 동의하고 10% 부가세를 받고 부가세를 납부시 발생되
 는 문제는?

A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가 공급하는 용역이 해당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이어야 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하며, 전문서비스업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하고 있어야 하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국내에서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실체가 중국법인이라면 외국법인에 해당되며, 하나은행의 경우도 외국환은행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도 영세율 조건을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공하는 용역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관련 용역이라면 상호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거래상
 대방의 국가가 중국이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나, 제공용역이 전문서비스업 관련 용역이라면
 상호주의가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법 통칙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호면세주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합니다.

대손세액공제요건 및 적용절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공급받는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이나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해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적용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5②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①에 의한 대손금 인정사유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상법 제122조·제147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보험료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2년 또는 1년 등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행위에 따른 채권이라도 민법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어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음법상 어음의 소멸시효규정은 상법 규정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어음법상 소멸시효규정은 어음 자체에 대한 시효규정으로 본래의 매출채권에 대한 시효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조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의 적용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수표법 제51조는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민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 적용하는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을 두고 있어 이 규정은 상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불능 채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서 파산이 선고되어 회수하지 못하게 된 채권 및 채무자 재산이 국가 등에게 강제 집행 처분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7)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수표 및 어음

어음·수표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도발생일이란 어음의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어음의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그 어음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제시기간경과 후에 제시한 때에는 은행이 그 지급을 거절하므로, 어음의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기간을 넘겨서 제시된 어음에 대하여는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어음발행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권은 존속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8) 그 외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사유

이밖에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받거나 대손처리 요구받은 채권,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중소기업청장 등이 인정한 것 등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절차 및 대손사실입증 서류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 채권배분계산명세서·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 등(파산·강제집행시), 가정법원 판결문(사망·실종선고시), 회사정리계획인가안(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시), 부도어음이나 수표사본(부도어음·수표시) 등이 있다.

◆ 대손사실 입증서류 ◆

유형별	첨부서류
파 산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획서
강제집행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획서
사망·실종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획서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화의인가안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어음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원본)
상법상의 소멸시효 및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	매출(입)세금계산서, 기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대금 청구내역 등)
기 타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의 회수불능 입증서류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일반증여 - 저가양수도 비교

◎ 일반증여

증여재산가액	10억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과세표준	9억5000만원
세율	30%
산출세액	2억2500만원

◎ 저가양수도

매수자 증여세	매도자 양도세(비과세 대상자)	
기준금액 미달로 저가양수도 증여규정 배제	양도가액	10억원
	취득가액	5억원
	양도차익	5억원
	비과세 양도차익	5억원
	과세 양도차익	-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금융투자소득	국내 상장주식 · 국내 주식형 펀드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손익동산 /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기타 금융투자소득	해외 주식형 펀드(ETF),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비상장주식 등 손익동산 / 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과세방법	반기 원천징수
이월공제	결손금 이월공제 5년간 허용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요 특징

	19세 이상 거주자		15~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가입대상	-	근로소득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가입 ·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아닐 것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세율	비과세 한도 초과되는 과세표준은 9.9%로 과세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미납입금액 이월 가능)				
의무 보유기간 / 만기	3년 / 5년(연장 가능)				
중도인출	가능(납입원금 한계액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 · 인출 횟수에 제한 없음)				



직장인영어회화 공부법 9

직장에서 영어를 떠나지 마세요

영어 환경에서 일하는 비영어민의 경우, 퇴근할 때 두뇌의 "영어" 부분을 끄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때때로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고, 누구나 가끔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즉, 직장에서 영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나 자유 시간에 영어를 배우십시오.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사교 행사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등 직장 밖에서 연습할 기회가 많습니다.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근무 시간 외에 영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어 학습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며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옵션이 아주 많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팟캐스트를 듣고, Youtube 비디오를 보고,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영어만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여가 시간에 최대한 영어로 일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사업상 비밀 사용료의 분쟁으로 법원판결로 지급받는 경우라도 판결확정시점에 부가세 과세됨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사전법규부가-1897, 2022.04.13

■ 질 의

- 특정 제품 관련 사업상 비밀을 제공하고 판결확정에 따라 약정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 회 신

사업자가 자기가 보유한 특정 제품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을 거래처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액의 사업상 비밀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해당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대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재산-2592, 2022.05.18

■ 질 의

- 2018.12.31.까지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2019.01.01. 이후 해당 분양권(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해당 분양권이 준공되어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97의5①(1)에 따른 취득 요건* 외에 나머지 요건[조세특례제한법 97의5①(2) (3)]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양도할 예정
- * 해당 주택은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였음을 전제

질의

- '18.12.31.까지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배우자로부터 '19.1.1. 이후 분양권의 지분(1/2)을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 조세특례제한법 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1/2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제1호의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최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서면법규소득-2067, 2022.10.06

■ 질 의

-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비, 면접비, 최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와 최소수수료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2022.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2022.09.28.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최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의조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추후 동 배당금은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575, 2022.12.14

■ 질 의

- (질의1)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상 주식의 처분으로 보아 과세이연이 종료되는지 여부
- (질의2)지주회사의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이 유지된다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을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하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추후 동 배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국산차 등 사치품 개소세 3년→2년으로 조정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소세 기준판매비율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제도로,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윤에 따라 과표구간을 낮추거나 올리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3년 적용은 너무 길다는 건의가 나왔다"며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별소비세법상 개소세가 붙는 품목은 자동차, 보석,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모피, 고급 가구 등이다. 특례상 제조장에서 소비자에 직접 상품을 판매할 경우로 한정된 만큼 현재에는 국산차와 고급가구, 모피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가장 먼저 조정된 것은 국산차 세금이다. 첫 위원회에서 기준판매비율이 18%로 결정돼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차와 달리 제조장 반출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잡히는 국산차 세금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일례로 공장 반출가격 4200만원 국산차를 기준으로 보면 당초 제도상 과세표준이 4200만원으로 적용돼 개소세 210만원, 교육세 63만원, 부가가치세 447만원 등 총 72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특례가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는 과세표준이 기존보다 18% 낮은 3444만원으로 적용되면서, 개소세 172만원, 교육세 52만원, 부가세 442만원 등 총 666만원 세금이 붙는다. 기존보다 세금이 54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현행 적용기간이 3년인 만큼 자동차 개소세는 내달 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올해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에 기재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의 탑' 받으면 세정 지원 혜택"... 무역협회-국세청 합의

국세청이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주어지는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 조기 지급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과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상을 받은 업체에 세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국세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수상 기업 명단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의 탑'은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으로, 2022년 기준 수상 중소기업 수는 1천700여개에 이른다.

노동부, 내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 안 해준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은 ▲회계 공시 시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 구체화 ▲회계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것이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주지 않는다.

근로자가 납부한 조합비는 기본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간 조합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30%를 받는다.

정부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나뉘는 것으로 노조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을 요구해왔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계산관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하세요

- 국세청 : 2023. 6

-
- 2023년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금)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 3·6·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입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도 게시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 중소 · 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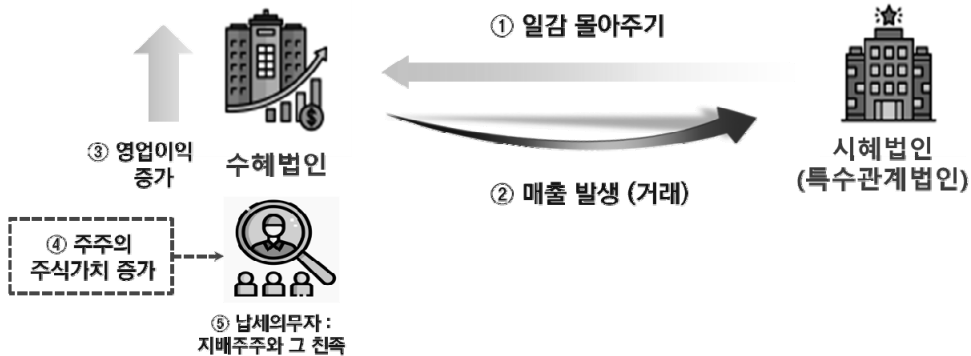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참고 1】

*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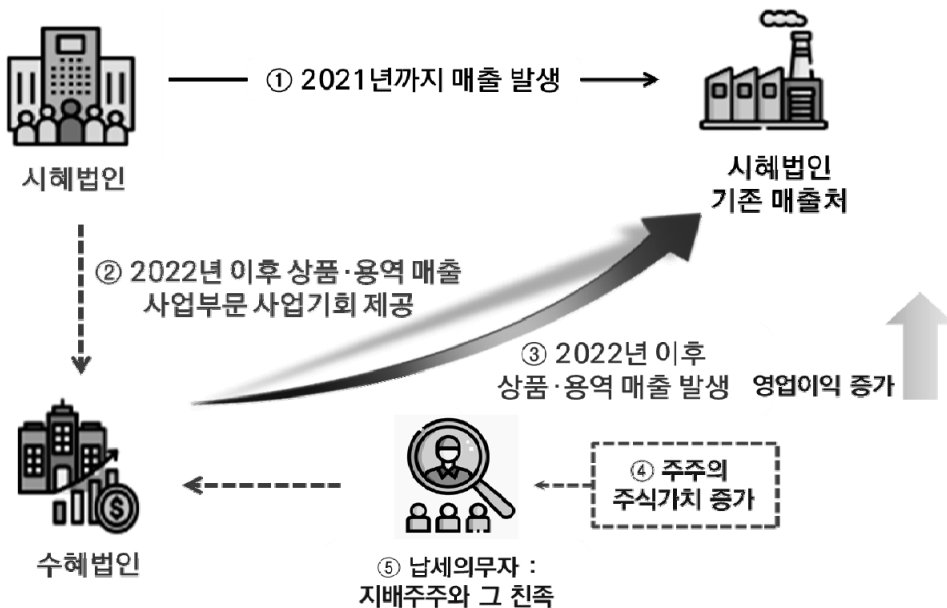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신고·납부기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30.(금)*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안내)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3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참고 3】하여 신고대상 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1,635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 발송하여 수증자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2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20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자이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진신고·납부하여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실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세법개정내용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4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 (세법개정) '22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 ① 종전에는 수출목적 국외거래는 기업 규모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만 제외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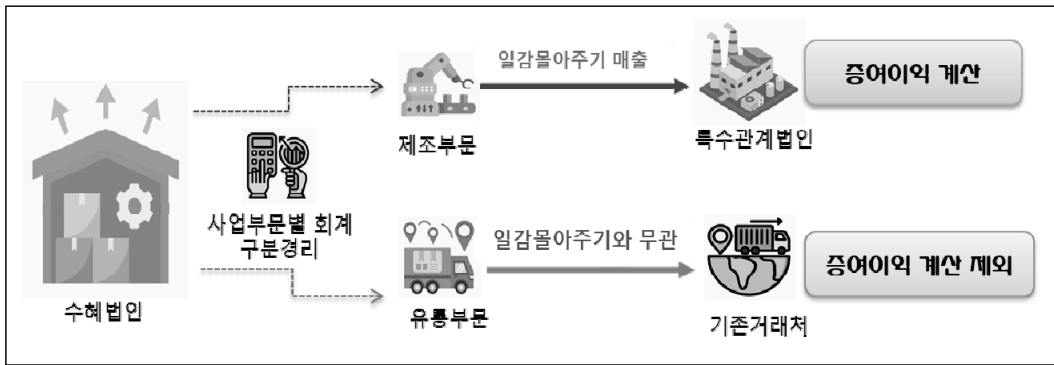
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수출 목적	국 내 거 래	과세 제외	과세 → (개정) 과세 제외
	국 외 거 래	과세 제외	과세 제외

○ ②일감 과세의 기본 단위는 법인이나, 법인 내 사업부문이 여럿이고,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사업부문별 과세를 위해서는 회계 구분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분류



○ ③지배주주 등이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공제 가능한 배당소득												
종 전 규 정		사업연도 말일부터 일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배당소득 공제 가능 기간												
개 정 규 정		직전 사업연도 일감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배당소득 공제 가능 귀속기간 확대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라며,
- 세법개정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 전담직원이나, 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4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 실시

- (세무검증)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통사항]

- 중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나,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참고 1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 과세요건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¹⁾ (중소기업 50% · 중견기업²⁾ 40%)를 초과할 것
 - 1) 일반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 2) 직전3개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기업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 (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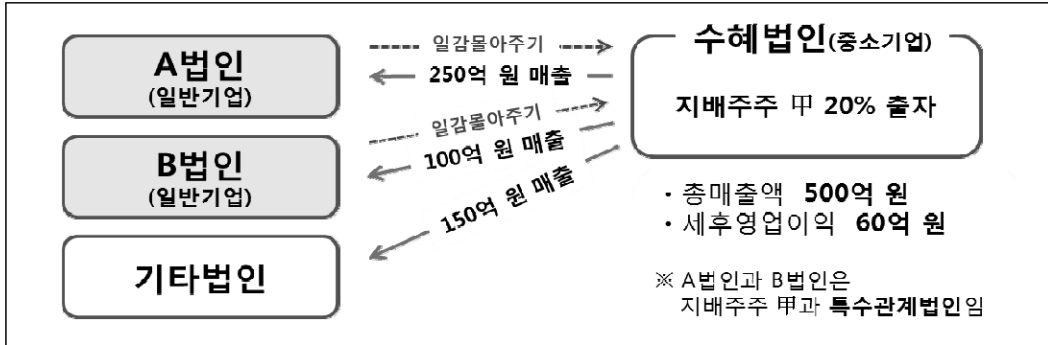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 지배주주 甲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후영업이익 : 60억 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 70%(350억 원/500억 원)
 - 주식보유비율 : 20%
 - 증여의제이익 : 60억 원 × (70% - 50%) × (20% - 10%) = 1.2억 원

□ 용어설명

- 수혜법인 : 법인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그룹 중 아래의 사람을 말함
 -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특수관계법인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참고 2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 과세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수} \times 12] \times 3$

② 정산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 증여시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참고 4 -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Q1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Q2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

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이라 함) §34의3⑧)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	---	--

Q3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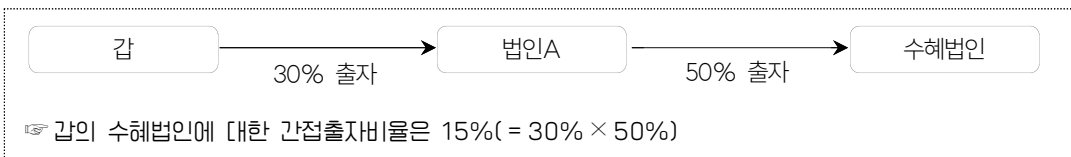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⑧)

| 과세제외매출액 |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②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③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

Q4 증여의제이의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Q5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 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⑫)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 ① 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참고 5 -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Q1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882, '19.12.27.)

Q2

출자지분을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Q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株式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Q4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신고 시) |

-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times 12] \times 3$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정산 시) |

-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Q5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21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0년부터 '22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6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신고검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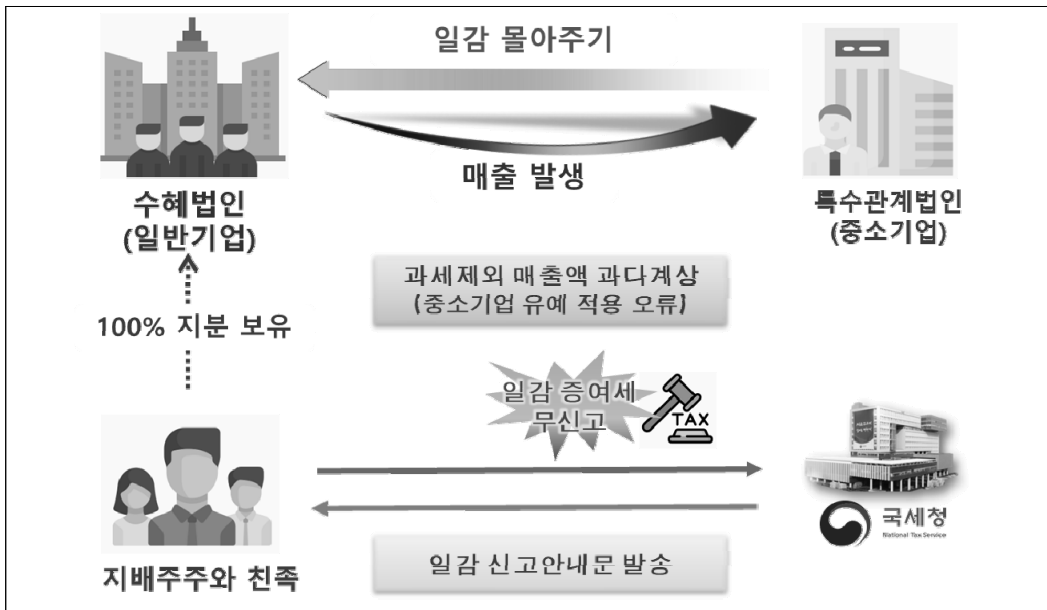
사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잘못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 ○ ○
- 성 명 : ○ ○ ○
- 소재지 : ○ ○ 시

□ 주요 적출 사항



-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초과여부 과세요건 검토 시 일반기업으로 적용하여 일감몰아주기 신고를 해야 하나,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잘못으로 전액 과세제외 매출액 계상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 억 원 추징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해설

— 국세청, 2023. 6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의 계산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1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 세후영업이익 = (가 - 나) × 다

-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다. 과세매출비율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입니다(상증령 §34의3⑫1).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① ± ②)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② 영업손익과 관련된 아래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주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을 말하므로, 세무조정 전 영업손익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 첨부서류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는 영업손익과 관련된 7개 세무조정사항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 예시

- ① 매출 누락액
- ② 계정과목 분류 오류 :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를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가액
- ③ 가공계상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 ④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손금 중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경비 손금부인액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① × ②)

- ①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
- ②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 ②의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다. 과세매출비율(상증령 § 34의3③)

$$\text{과세매출비율} = 1 - \left(\frac{\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매출액 포함)}}{\text{수혜법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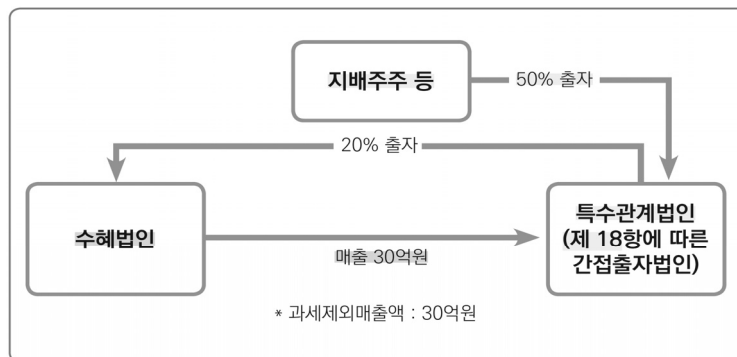
2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과세매출비율을 산정할 때, 앞에서 설명한 "과세제외매출액" 8개 유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상증령 §34의3⑭).
-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8개 유형)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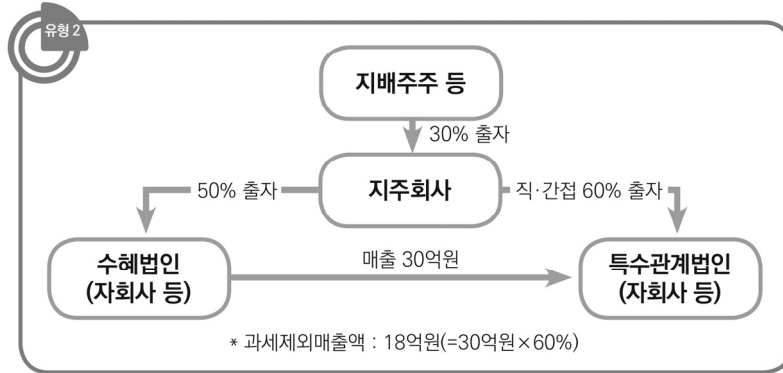
1.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상증령 제34조의3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하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라 함)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①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상증령 §34의3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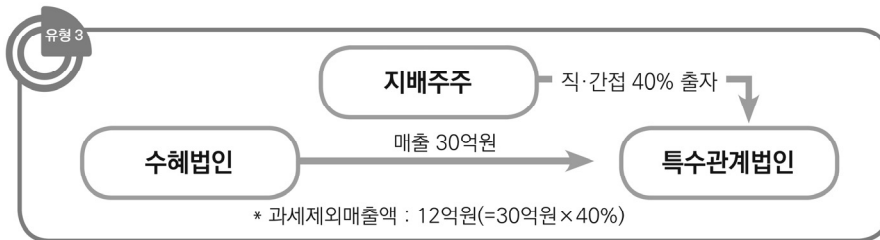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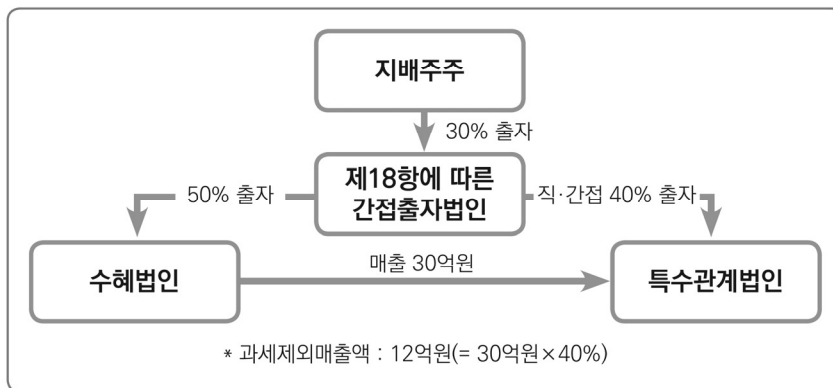
-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 34의3⑭2).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 34의3⑭3)



- ④ 상증령 제34조의3 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 34의3⑭4, 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 제1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주회사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동조 제14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1.4.)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적용범위 (상증령 §34의3④)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과세매출비용 산정시 적용)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82, 2014.04.02.)

- 과세요건 판단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left[\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right]$$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left[\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right]$$

-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과세매출비용

$$\left[\frac{\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times 100 \right]$$

3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 중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비율"이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거래비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40%)의 1/2을 초과하는 비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말합니다. (상증법 §45의3①).

-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증자인 각 주주별로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증령 §34의3④).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과세요건 판단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만 반영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left[\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 \times 100 \right] - 5\%$$

② 수혜법인이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

$$\left[\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 \times 100 \right] - 50 \cdot 20\%$$

4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직접 + 간접)	일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주식보유비율 - 0 %	주식보유비율 - 10 %	주식보유비율 - 5 %

◎ 중소·중견 기업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세후영업이익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곱하는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은 각 주주별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중소 10%, 중견 5%)을 차감한 비율을 말합니다.

※ 일반기업은 주식보유비율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 한계보유비율 차감 순서(상증령 §34의3㉓)[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
-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이 낮은 것에서부터 차감
- 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0.1%)미만인 경우의 간접출자관계는 제외되므로 한계보유비율 차감 대상이 아님

◎ 수증자의 간접보유비율 계산을 위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만을 말합니다.

- 이는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에만 고려할 경우 제3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비율을 포함하되 소수의 지분을 출자한 경우까지 확대되는 경우 과세실익은 미미하면서 계산만 복잡해지므로 아래와 같은 일정 범위의 법인으로 제한한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계산방법과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비교

● 지배주주 판정시 (상증령 §34의3②)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상증령 §34의3⑬)

-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①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② 지배주주 등과 ①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③ ① 및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5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증여의제이익 계산

- 각 수증자별로 계산(법인유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달라짐)
 -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 2이상인 경우는 각각 계산)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함
- 배당받은 소득에 대한 일정금액 공제

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상증령 § 34의3⑮, 2023.2.28.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배당



가능이익"이라 함)으로 합니다.

$$\text{배당 소득} \times \frac{\text{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상증령§34조의3⑬에 따라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3①)

- 법 제51조의2제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용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배당 소득} \times \frac{\text{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left[\text{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left(\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times \text{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right) \right]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나.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이익을 준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상증령 §34의3⑱).

다.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지배주주 1명이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라.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상증법 § 47②)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개별 건별로 과세되므로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 47①).

마. 요약

수혜법인		과세 요건	요건 충족	증여의제이익 계산
중소기업	주식보유비율	> 10%	→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50%		
중견기업	주식보유비율	> 10%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40%		
일반기업 (공시대상기업 집단포함)	주식보유비율	> 3%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30%		

* 요건판단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

* 증여의제이익계산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4개)}}{\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4개)}}$$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계산

1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증여의제이익은 (1)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간 부문별 영업이익을 추정하여 계산하되 (2) 3년 후 실제손익으로 정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추가납부 및 환급)합니다. 즉, 사업기회를 최초로 제공받은 사업연도에 3년분을 일시에 신고·납부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면, 실제로 발생한 부문별 영업이익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증여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이 당초 증여세 납부당시 계산했던 증여의제이익보다 작은 경우에는 납부했던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3년간 증여의제이익

○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1)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 34의4 ③). 한편, 이러한 수혜법인의 이익계산 방법은 다음(3)의 정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수혜법인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대해 아래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에서 편의상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이라 한다.)

-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또한, 수혜법인의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전체 세무조정후 영업이익을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 ②)

① 수혜법인의 전체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②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 ÷ 전체 매출액

(2)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계산

-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은 다음 '가'의 세액에 '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 · 감면액을 뺀 세액
- 나.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해당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합니다.(상증법 § 45의4⑤)

$$\text{배당 소득} \times \frac{\text{상증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나. 정산 증여의제이익

(1) 정산사업연도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규정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규정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당초 실제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증여 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당초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 45의4③)

○ 정산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상증법 § 45의4④)



(2) 배당소득 공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상증령 34조의4 ⑥)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정산증여의제이익) ÷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시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나. 정산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 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 2023. 6

- 금융감독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음
- 회계 및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4개를 선정하여 사전 예고함
 - 회사 및 감사인은 해당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3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4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신용위험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 * 채무자 상황 등 기초하여 신용위험 평가
 - 기대신용손실 관련 주석공시
 - * 기간별 손실충당금 잔액, 변동내역 등
- ※ (업종) **초** 업종(건설업, 조선업 제외)

전환사채(CB) 콜옵션

- 콜옵션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
 - *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 소급적용(원칙)
 - 콜옵션 관련사항 주석공시
 - * 발행조건, 평가손익, 거래(양도)손익
- ※ (업종) **초** 업종

장기공사수익

- 합리적인 진행률 측정
 - * 산출법·투입법 적용, 일관성 있는 측정
 - 계약 관련 주석공시
 - * 계약자산·손실충당금 등
- ※ (업종) **건설업, 조선업**

우발부채 공시

- 계약 및 소송 관련 의무사항 검토
 - * 자원 유출가능성 및 금액 추정
 - 종류별 세부내역 주석공시
 - * 추정 금액, 불확실성의 정도, 변제가능성
- ※ (업종) **초** 업종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2.10)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4.6)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금융위, 금감원, 학계(2), 기업계(3), 회계업계(3)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총 6차례 회의 개최('22.9~12월)

[추진 배경]

'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17.10월)되어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동 제도들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투명성은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지만, 5년 전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이 시장과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제도 도입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 회계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감사보수의 약 90% 수준으로 그간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회계 관련 비용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한편, 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효과(경영진의 회계상 이익조정 감소 등)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년부터 시행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규모와 이해관계자 수를 고려해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고, 중복 보고체계는 통합한다. 우선,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24→'29년)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고려하여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되어 중복보고에 따른 비효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 비상장 회사(자산 1~5천억)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한다. 이는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중소 비상장사의 성장유인을 제약한다는 지적과 일정 규모 이하 신규 상장기업에게는 각각 5년과 3년씩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미국·일본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②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감사인 지정제는 직권지정과 주기적 지정으로 구분된다.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27개) 발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한편, 주기적 지정은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면, 그 후 3년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과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시 직권지정사유를 대폭 확대(11→27개)하고, 주기적 지정제를 새롭게 도입('20년~)하였다. 회계학회 연구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제 확대는 감사품질을 유의하게 향상시킨 것(감사시간 증가, 저가수주 축소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장회사 중 지정감사를 수감하는 기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짐(50% 내외)에 따라 감사인 간 품질경쟁이 저해되고,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권한남용행위 문제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정비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한다. 우선,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한다. 특히,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직권지정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다.

* ❶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❷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❸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

다만, 주기적 지정제('20년~)는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③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업종별)으로, 3년에 1번씩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조정한다. 그간 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이 법정 최소감사시간이 아님에도 일부 지정 감사인들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기업계(5명), 회계업계(5명), 회계정보이용자(4명), 금감원(1명) 등 총 15명(공인회계사회 내)

이에 표준감사시간이 기업과 감사인 간 감사계약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성격과 합의과정을 내실화 한다. 우선,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하여 가이드라인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15명)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감사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감사예정시간을 책정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④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이 밖에도 주기적 지정제가 당분간 존치되는 만큼,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효과는 유지하되,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행위와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여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한다. 또한,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 전까지 지정 여부 판단 기준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하고, 동일한 사유로 지정감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년 ~ 3년의 최소 자유선임기간을 보장한다. 그리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게는 다음 년도 지정시 지정 기업수를 차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상세한 내용은 (별첨) 「회계제도 보완방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2023. 6

❶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5년, '24→'29년)

❷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 직권지정사유 정비(現 27개 중 16개 사유 완화)
- 주기적 지정제는 당분간 현재대로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 재검토

❸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 명확화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2.10)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4.6)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금융위, 금감원, 학계(2), 기업계(3), 회계업계(3)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총 6차례 회의 개최('22.9~12월)

[추진 배경]

'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17.10월)되어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동 제도들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투명성은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지만, 5년 전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이 시장과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제도 도입비용 대비 효과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 회계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감사보수의 약 90% 수준으로 그간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회계 관련 비용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한편, 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효과(경영진의 회계상 이익조정 감소 등)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년부터 시행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규모와 이해관계자 수를 고려해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고, 중복 보고체계는 통합한다. 우선,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24→'29년)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고려하여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되어 중복보고에 따른 비효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 비상장 회사(자산 1~5천억)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한다. 이는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중소 비상장사의 상장유인을 제약한다는 지적과 일정 규모 이하 신규 상장기업에게는 각각 5년과 3년씩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미국·일본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②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감사인 지정제는 직권지정과 주기적 지정으로 구분된다.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27개) 발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한편, 주기적 지정은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면, 그 후 3년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과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시 직권지정사유를 대폭 확대(11→27개)하고, 주기적 지정제를 새롭게 도입('20년~)하였다. 회계학회 연구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제 확대는 감사품질을 유의하게 향상시킨 것(감사시간 증가, 저가수주 축소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장회사 중 지정감사를 수감하는 기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짐(50% 내외)에 따라 감사인 간 품질경쟁이 저해되고,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권한남용행위 문제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정비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한다. 우선,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한다. 특히,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직권지정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다.

* 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

다만, 주기적 지정제('20년~)는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③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업종별)으로, 3년에 1번씩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조정한다. 그간 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이 법정 최소감사시간이 아님에도 일부 지정 감사인들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기업계(5명), 회계업계(5명), 회계정보이용자(4명), 금감원(1명) 등 총 15명(공인회계사회 내)

이에 표준감사시간이 기업과 감사인 간 감사계약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성격과 합의과정을 내실화 한다. 우선,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하여 가이드라인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15명)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감사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감사예정시간을 책정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④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이 밖에도 주기적 지정제가 당분간 존치되는 만큼,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효과는 유지되되,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행위와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여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한다. 또한,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 전까지 지정 여부 판단 기준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하고, 동일한 사유로 지정감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년 ~ 3년의 최소 자유선임기간을 보장한다. 그리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게는 다음 년도 지정시 지정 기업수를 차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상세한 내용은 (별첨)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